

격리대상 여대생, 통보 못받아 8일간 정상적인 학교생활

광주·전남 의심환자 학생 의사 행적 살펴보니

삼성병원 치료 11일만에 서울강서→지역보건소 연락 보건당국, 자가격리 대상 결정해놓고 뒤늦게 통보

“자가 격리 대상자”임에도 해외로 출국하는 의료진 관리 문제나 격리 대상 여부조차 모른 채 티미널과 기숙사 등을 돌아다니던 20대 여대생의 행적 등은 보건당국의 허술한 방역 시스템을 엿볼 수 있다.

메르스와 관련된 총체적 부실 방역 체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역 사회로 메르스 감염자가 전파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잠재우지 못한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버젓이 기숙사·티미널 등 다중이용 시설 돌아다니고=서울에 사는 대학생 A씨는 지난달 27일 밤 갑자기 복통을 호소, 삼성서울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당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엔 14번 환자가 입원 치료 중이었다. 14번 환자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과 환자 등 34명을 감염시켜 최초 환자(38명·2.3차 감염) 다음으로 많다.

A씨는 당시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된 지난달 31일 자신이 다니는 전남 A대학교 기숙사로 돌아왔고 지난 7일까지 별다른 제재 없이 교내생활을 이어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10분께 과제를 준비하러 광주 티미널에 도착한 뒤 대학 소재 보건소 전화를 받고서 자신이 ‘자가 격리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

다. 해당 보건소도 A씨와 통화하기 10분 전에야 서울강서보건소의 연락을 받고 자가 격리 대상자임을 파악했다.

A씨는 이후 광주시 동구보건소 구급차로 서울로 이동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격리 대상자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다.

◇‘자가격리 대상자’ 해외 출국=메르스 확진자를 진료한 순창 모 정형외과 원장 B씨가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버젓이 가족을 동반한 채 1박 2일간 외국을 다녀왔다. 의사 B씨는 지난 5일 오후 자가격리 대상자로 결정됐다.

지난 4일 호남권에서 최초로 메르스 양성판정을 받은 환자(여·72)의 행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2일 “허리가 아프다”며 병원에 온 해당 환자를 B씨가 직접 진료한 사실이 확인된 뒤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B씨를 자가격리 대상으로 결정해 놓고도, 보건당국의 메르스 통합관리전선망에 7일 오전에야 등록하는 바람에 B씨의 지난 6일 새벽 출국을 막지 못했다.

보건당국은 의사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인적사항 등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메르스 통합관리전선망 등록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자가격리

집에 머무르며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는 격리방법. 증상이 의심되면 보건 인력의 안내로 임시격리병원에서 검사 뒤 증상이 사라지면 병원 방문한 날로부터 14일간 자가 격리 조치하고 이 기간 증상 없이 없으면 해제한다. 대상자가 주거지에서 벗어나려할 경우 보건소 관계자가 경고·설득하고, 이에 불응하면 의료 시설에 강제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자가 치료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고,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다.

▲임상격리(능동 감시) 자신신고 등에 의해 보건복지부가 대상자로 지정하면 자치구와 보건소가 확인증을 교부해 하루에 2차례 전화 확인으로 증상 발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의사 B씨는 “지난 7일 오전 필리핀에서 가족과 머무르던 중 경찰, 순창군, 광주시 등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사실을 듣고 서둘러 귀국하러가게 그날 밤 귀국했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그러나 “지속적으로 B씨와 해당 병원 원무과장 등에게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된 사실을 알렸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지난 6일 문자로 1차 통지하고 7일 오전에야 유선으로 2차 통지를 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백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8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및 대책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답변을 준비하며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출국전까지 자가격리 대상자 통보 못 받아”

“복지부서 능동감시 대상자 판정 받았는데 이틀후 보건소서 자가격리 대상자 전화 통보”

순창 확진환자 진료 의사 인터뷰...“필리핀서 연락 받아”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음에도, 해외 출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제기됐던 순창 모 병원 원장 A(47)씨는 8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사로서 논란을 일으켜 죄송스럽다”면서 “국의 출국 사실이 노출될 경우 외교문제로 비화할 우려가 있어 소재를 (당국에) 빨리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정부가 공개한 ‘메르스 환자 발생·경유 병원’ 명단에 포함된 순창 최선영 내과병원 원장(여·45)과 부부다.

A씨는 “아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70대 여성 환자가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보건당국의) 연락을 지난 4일 밤 전해 듣고 5일 새벽 일찍 출근해 스스로 환자를 퇴원시키고 병원을 폐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광주 남구 집으

로와 출국 준비를 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고 말했다.

A씨는 “출국 전까지 (내가)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필리핀에 머물던 7일 오전 경찰, 순창군청, 광주시, 전북도 등에서 전화가 걸려와 뒤늦게 자가격리 대상자로 결정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메르스 확진 증세가 나타나기 전이지만 내가 직접 진료한 사실이 있는 만큼 스스로 조심했다”고도 했다. 1박 2일간 가족과 외국에 머무는 동안 외부 접촉을 최대한 자제했다고 덧붙였다. 필리핀 출국은 사전에 일정이 잡혀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확진 환자를 직접 진료했어도 (고열 등) 증세가 나타나기 전 진료한 만큼 ‘자가격리 대상자’로 결정한 보건

당국 결정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질병관리본부와 전북도, 순창 보건소 측이 성급하게 자가격리 대상자로 결정했다”면서 “이제라도 임상격리(능동감시) 대상자로 한 단계 낮춘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나와 가족은 발열 등 메르스 증세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했다.

한편, A씨는 메르스(중동 호흡기증후군) 양성 판정을 받은 70대 여성 환자를 지난 2일 진료한 사실이 확인돼 보건당국으로부터 지난 5일 오후 ‘자가격리’ 대상자로 결정됐다. 순창보건소 측은 그러나 통화가 이뤄지지 않아 6일 오후 문자를 통해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1차 통지했고, 이에 앞서 해당 병원 원무과장 등 A씨 측에 5일 오후부터 지속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유 의동의 의원 국회 현안질의 보건당국 오락가락 대응 질타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이 8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한 국회 긴급 현안 질문에서 “저는 자가격리 대상자이나, 능동감시 대상자이나”고 따져 물으며 보건당국의 부실·혼선 대응을 질타해 눈길을 끌었다.

첫 번째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던 평택성모병원을 최근 방문했던 유 의원은 이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 “저도 그 병원을 방문했기 때문에 자신신고를 위해 129에 수십 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면서 “결국 복지부 관계자에게 문의해서 능동감시 대상자로 판정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이를 뒤에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어떻게 된 것인지 따져물었다.

이에 문 장관은 잠시 머뭇거리던 뒤 “아마 보건소에서 관리를 강화하다 보니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다”고 답했다.

경찰이 발표한 메르스 현장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자가격리 대상자가 주거지에서 나가려고 시도할 경우 보건소 관계자가 경고·설득하고, 이에 불응하면 의료시설에 강제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자가 치료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고,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다.

유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보건당국이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해 주거지에서 나올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이와 관련, 유 의원 측은 “자가격리 대상자 통보를 받은 뒤 보건소에 문의했더니

능동감시 대상자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해명한 뒤 “지자체와 보건소가 감광질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을 지역구의 유 의원은 최근 평택성모병원에 다녀온 뒤 메르스에 감염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국회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심지어 “유 의원이 메르스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음에도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 약 30명이 참석한 회의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사실정보지(짜리시)가 돌아 유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능동감시 대상자라고 해명한 바 있다.

능동감시 대상자는 격리될 필요 없이 하루에 한두 차례 보건당국의 전화 확인으로 문진을 받고 보건소에서 확인증을 교부받으면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각막에 초정밀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윤영용 병원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부작용: 수술 초기 아간 및 빛반, 노안리식 수술시 건조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심의필 제 140611-중-59153호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중-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